

2024. 12. 19

# EU 통상정보



## 新EU집행위 통상·산업 주요 추진정책 전망

브뤼셀지부 (kba@kba-europe.com)

### 1 최근 EU의 통상·산업 정책 추진 현황

- (그린딜 추진)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위는 집권 초기 EU 지역의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딜을 발표하고 핵심 통상·산업 정책으로 추진
- ▶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그린딜 후속 조치를 끊임없이 발표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부각
- ▶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역내 생산을 확대하고자 'REPower EU'를 '22년에 발표하며 그린딜 추진에 역점
- ▶ 폰데어라이엔 1기 후반에는 역내 빈약한 탄소중립산업 역량을 확충하고 핵심 원자재부터 폐기물까지 역내 순환 공급망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 및 후속 법안을 잇달아 발표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위 그린딜 주요 추진 경과》

년월	주요 내용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그린딜 (Green Deal)</li> <li>- '50년까지 EU지역 탄소중립 실현 및 탄소중립산업 육성</li> </ul>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 실행계획 (Circular Economy Action Plan)</li> <li>- 각 산업 내 제품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 설계 시부터 반영</li> <li>- 세부 산업 및 분야별 35가지 실행계획 포함</li> </ul>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감축 패키지 'Fit for 55'</li> <li>- '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년 대비 최소 55% 감축</li> <li>-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를 개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내연차 규제 등 포함</li> </ul>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REPower EU'</li> <li>- EU 지역의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목표</li> </ul>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딜 산업계획 (Green Deal Industrial Plan)'</li> <li>- EU 지역 내 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li> <li>-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및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 등 포함</li> </ul>

\* 자료 : 집행위 발표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 폰테어라이엔 1기 집행위가 수립한 총 661개의 이니셔티브 중 167개가 그린딜 관련 정책이며 이 중 87개를 규정 및 지침 등으로 법제화<sup>1)</sup>

- 분야별로는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규정·지침이 34개로 가장 많으며, 그 중에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코디자인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포함
- 역내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한 에너지 관련 분야가 28개로 뒤를 이음

《폰테어라이엔 1기 내 발효 완료된 그린딜 분야별 규정·지침》

구분	개수	주요 규정·지침
기후·환경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li> <li>▶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li> <li>▶ 산림전용방지규정*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li> <li>* 최근 EU의회와 이사회는 예정보다 시행일을 1년 연기하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잠정 합의</li> <li>▶ 자연복원법 (Regulation on nature restoration)</li> </ul>
에너지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터리 규정 (New Battery Regulation)</li> <li>▶ 풍력발전패키지 (Wind Power Package), 태양광 에너지 전략 (Solar Energy Strategy)</li> <li>▶ EU 수소은행 (European Hydrogen Bank)</li> </ul>
교통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배출기준 'Euro 7' 기준 개발 (Development of Euro 7 emission standards)</li> <li>▶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li> </ul>
농수산업·기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규정 (Rules establishing Common Agricultural Policy strategic plans)</li> </ul>

\* 자료 : EU 의회 입법 현황(Legislative Train Schedule)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 對EU 수출 및 역내 진출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규정이 폰테어라이엔 1기 후반에 채택·발효 됐으며 차기 집행위는 도입된 규정·지침에 대한 하위 입법을 계속 진행할 전망

- 그린딜 관련 주요 입법 조치는 역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규제들로 기업 영업활동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은 관련 산업 육성 목적으로 입법

《폰테어라이엔 1기 발효된 그린딜 관련 주요 입법 내용》

발효일	입법명 및 주요 내용
'23.5월	<p><b>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EU 역내 강도 높은 탄소배출 규제에 의해 역내 기업의 역외 기업 대비 불리한 경쟁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탄소중립화를 유도</li> <li>▶ (주요 내용) 규제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신고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으로 생산주기 상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담 ('25.12월까지의 전환기간에는 신고서만 제출)</li> <li>*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대상, 추후 규제 대상 제품 추가 가능</li> </ul>

1) European Parliament, The six policy priorities of the von der Leyen Commission: An end-of-term assessment, 2024.04.19.

발효일	입법명 및 주요 내용
'23.6월	<b>산림전용방지규정 (EU Deforestation Regulation)</b>
	<p>▶ (목적) 기존 산림을 파괴 및 용도 변경해 특정 제품*을 생산한 경우 EU 역내 유통을 금지시켜 글로벌 산림 보호를 유도</p> <p>*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p> <p>▶ (주요 내용) '20. 12. 31일 이후 기존 산림에서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역내 수입 금지. 규제 대상 제품을 역내 수입하는 기업은 '공급망실사선언서'를 제출해야 함</p> <p>* 당초 '24. 12월말에 본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집행위는 기업 애로를 감안해 시행일 1년 연기를 제안</p>
'23.8월	<b>배터리 규정 (EU Battery Regulation)</b>
	<p>▶ (목적) 기존 EU 배터리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대체,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p> <p>▶ (주요 내용) EV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산업의 역내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생산 과정 상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규정</p>
'24.5월	<b>핵심원자재법 (CRMA – Critical Raw Material Act)</b>
	<p>▶ (목적)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30년까지 핵심원자재에 대한 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 국가와의 연대 확충</p> <p>▶ (주요 내용) △전략·핵심 원자재 선정기준 수립 및 원자재 선정, △'30년까지 역내 채굴 10%, 제련·정제 40%, 재활용 25% 역량 구축,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 65% 이하로 낮춤, △전략 프로젝트 선정 및 규제 완화, △자원순환 촉진, △모니터링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p>
'24.6월	<b>탄소중립산업법 (NZIA – Net-Zero Industry Act)</b>
	<p>▶ (목적) 그린딜 실현에 필수적인 역내 탄소중립 관련산업의 기술 및 제조역량을 강화</p> <p>▶ (주요 내용) 다음의 8가지 탄소중립 기술·상품의 역내 연간 수요 중 최소 40%는 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 - ❶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기술, ❷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기술, ❸배터리 및 저장기술, ❹히트펌프 및 지열 에너지 기술, ❺전해조 및 수소연료전지, ❻지속가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기술, ❼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❽그리드 기술</p>
'24.7월	<b>에코디자인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b>
	<p>▶ (목적) '20년에 발표된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EU 배터리 지침(Directive)을 규정 (Regulation)으로 대체,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강화</p> <p>▶ (주요 내용) 기존 지침 대비 적용 품목군을 모든 물리적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품에 대한 내구성,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수리용이성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 제조자는 '디지털제품여권'을 생성하여 제품 전 주기 지속가능성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의무 부담</p>
'24.7월	<b>공급망실사지침 (CSDD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b>
	<p>▶ (목적)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p> <p>▶ (주요 내용) 자사·자회사 및 거래 관계 업체 등에 대한 실사 의무 부과,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기업은 예방·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p>

■ (그린딜 역내 평가) 역내 산업계는 그린딜로 인한 강화된 규제로 행정적 부담 및 비용 증가 애로를 호소하는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최근 EU 우경화 추세로 그린딜 추진 약화를 우려

▶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그린딜 입법 조치로 인해 '22년에 약 19억 유로의 행정적 비용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행위가 추진한 주요 이니셔티브 중 유일하게 비용이 증가

- 역내 행정적 비용이 감소한 경제 관련 타 주요 이니셔티브와 달리 그린딜 정책 추진으로 행정적 비용이 순증하며 관련 기업의 행정적 애로 증가

《집행위 추진 주요 정책분야별 행정적 비용 순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유로/연)

추진 정책 분야	관련 규정 수	증가 비용	감소 비용	순증감
그린딜 (Green Deal)	15	2,352.3	-387.4	1,964.9
디지털 정책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13	1,899.8	-6,090.1	-4,190.2
역내 경제성장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	9	85.9	-4,862.3	-4,776.4

\* 자료 : Annual Burden Survey 2022 (EU 집행위)

▶ 기업 부담 비용 증가와 높아진 규제 장벽으로 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까다로워져 역내 기업간 경쟁이 약화<sup>2)</sup>

\* (유럽투자은행 'EIB Investment Survey 2023')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61%가 장기적 투자 장애 요인으로 높아진 규제 장벽을 꼽음

▶ 역내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회원단체 중 약 50% 이상이 지난 폰데어라이엔 1기 시절 각종 입법 조치로 규제 이행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집행위 및 의회에 요청<sup>3)</sup>

▶ 반면 역내 환경전문가들은 폰데어라이엔 집권 1기 기간동안 그린딜 관련 입법이 순조로웠다고 평가했으나, 최근 EU 정치권의 우경화 경향으로 향후 그린딜 이행의 후퇴를 우려<sup>4)</sup>

- '24.6월 실시된 EU의회 선거 결과 우경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실제 주요 그린딜 관련 규정에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

산림전용방지구정 (EUDR)	당초 '24.12.30 시행 계획이었으나 역내외 기업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년 시행 연기
PFAS 규제	'24년 중 규제(안) 확정이 예상되었으나 다양한 산업군의 반발로 인해 '25년도 중 규제(안) 확정이 예상, 배터리·반도체 등 산업군에는 규제 적용 예외 고려 중
내연기관차량 규제	독일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35년 이후 역내 판매 허용 여부 추후 논의

2) European Commission,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2024. 9. 9.

3) BusinessEurope, Reform Barometer 2024, 2024. 3. 20.

4) 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European Green Deal Barometer 4<sup>th</sup> edition, 2024. 5.

■ (디지털 산업) EU는 미·중 등 경쟁국에 역내 시장이 잠식되지 않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원정책도 추진

▶ 폰데어라이엔 1기 집권 기간 역내 데이터 및 AI 활용에 대해 다수의 입법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

AI법 (AI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일) '24. 8. 1 ('25.1월부터 단계적 시행)</li> <li>▶ (적용 대상) EU 역내에 AI시스템 공급자·AI시스템 이용자이며 법인 설립지는 무관</li> <li>▶ (주요 내용) AI를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대상·고위험·제한된 위험·최소 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 부과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1.5%부터 3,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7% 한도)</li> </ul>
디지털시장법 (D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일) '22. 11. 1 ('23. 5. 2 시행)</li> <li>▶ (주요 내용)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게 상호 운용성 보장, 데이터 결합 제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 의무사항 부과</li> <li>*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MS ('23.9월 지정)</li> </ul>
데이터 거버넌스법 (DG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일) '22. 6. 23 ('23. 9. 24 시행)</li> <li>▶ (주요 내용)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재사용, 데이터 이타주의(개인·기업이 데이터를 공익을 위해 자발적 제공) 촉진 등 규정</li> </ul>
데이터법 (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일) '23. 12. 13 ('25. 9. 14 시행)</li> <li>▶ (주요 내용) 제조사에 축적된 사용자의 데이터 독점 방지, 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형평성 보장, 민간 데이터에 대해 비상 상황 시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 역외로 데이터 전송 시 개인 정보 보호 등</li> </ul>

▶ 한편, '30년까지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달성을 위해 'EU칩법(European Chips Act)'을 발효·시행 ('23.9.21 발효·시행) 했으나 최근 역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인텔이 자사의 사정 및 보조금 지급 지연 등의 이유로 투자를 철회·지연\*

\* 프랑스·이탈리아에 대한 투자 철회, 독일 내 생산시설 건설도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가동 지연 전망

■ (방위 산업) EU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역내 방위산업 생산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산업전략'을 발표('23.3.5)

- ▶ 동 전략을 통해 ①'30년까지 신규 구매 방위산업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조달로 확보, ②'30년까지 EU 방산시장의 역내 거래 비중을 최소 35%로 확대, ③'30년까지 방위 투자액의 최소 50%를 역내 조달에 투입, '35년까지 60%로 확대
- ▶ EU 회원국들은 '25년~'27년 기간 중 15억 유로의 예산 투입을 위한 'EU 방위산업 프로그램 규정(A Regulat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EDIP)'의 자금 지원 기준을 논의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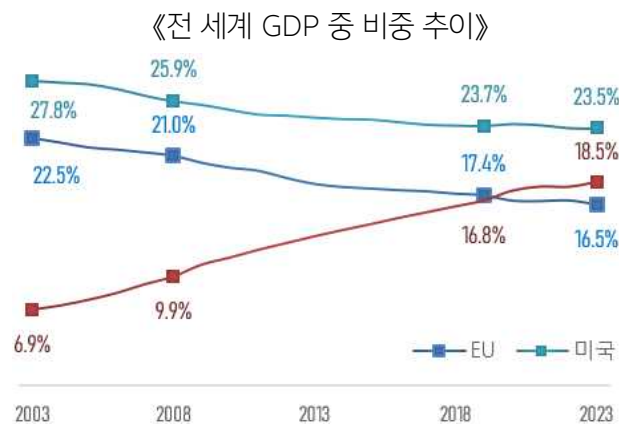
■ (역외 환경<sup>①</sup>) 그린딜 중심의 규제 강화로 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는 사이,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EU 대비 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있음

▶ 최근 20년간 EU와 미국 모두 전 세계 GDP 중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5년간 비중이 큰 변화가 없는 사이 EU의 비중은 0.9%p 하락

- 반면, 중국의 전 세계 GDP 중 비중은 '20년부터 EU를 앞서가며 점차 격차를 넓혀가고 있음

▶ 최근 5년간 1인당 GDP 성장률 또한 미국과 중국 대비 EU가 코로나19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회복도 순조롭지 못하며 '2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 발발로 EU 역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되던 EU 경제·산업에 악영향을 끼침



\* 자료 : World Bank Data

《1인당 GDP 성장률 추이》

지역	'19	'20	'21	'22	'23
EU	1.72	-5.72	6.13	3.43	-0.02
미국	2.00	-3.15	5.63	1.56	2.03
중국	5.57	1.99	8.35	3.00	5.30

\* 자료 : World Bank Data

■ (역외 환경<sup>②</sup>) EU는 미·중 등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을 감안해, 역내 보조금 지급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보조금·반보조금 규제를 시행

▶ EU집행위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발표('23.3.9) 역내 보조금 지급 정책을 강화\*

\* ①러우전쟁 관련 피해, ②유동성 증대 위한 보증·대출, ③전력 소비량 감축, ④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보급 촉진, ⑤탄소중립 산업화, ⑥탄소중립 전환 전략 분야 투자 촉진 분야에 대해 보조금 심사규정을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역외보조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매칭보조금'을 신설

- 집행위는 TCTF로 약 889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sup>5)</sup>했으며, 부문별로는 역내 탄소중립화 지원을 위해 약 394억 유로, 러·우 전쟁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약 495억 유로를 승인

- 탄소중립화 지원 보조금 중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총 승인 금액 중 1/4에 해당하는 109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생에너지 육성, 탄소중립산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

5) European Commission, List of Member State measures approved under TCTF, 2024.10.23

- 한편, TCTF에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EU 역내 투자 시 역외 국가의 보조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매칭보조금’ 개념을 신설했으며,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유럽 내 최대 배터리사인 노스볼트가 매칭보조금을 활용해 9.02억 유로의 보조금 수령을 승인 받은 바 있음

《항목별 TCTF 보조금 승인 내역》

구분	승인 금액 (백만유로)	비고
<b>총계</b>	<b>88,966</b>	-
<b>탄소중립화 지원 (Transition)</b>	<b>39,402</b>	-
재생 에너지 육성	13,811	풍력, 태양열, 수소 등 재생에너지 역내 생산 지원
탄소중립산업 육성	12,067	배터리, 태양열, 풍력, 히트펌프 등 역내 생산역량 구축
공정 내 탄소중립화	10,370	공정 내 온실가스 방출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타	3,154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및 농업 분야 지원
<b>러·우전쟁 위기 대응 (Crisis)</b>	<b>49,564</b>	-
기업·에너지 지원	25,864	에너지 가격 급상승에 따른 기업 유동성 보전 등
에너지 지원	7,520	에너지 공급사 지원
농축수산업 지원	5,082	채산성 악화된 농축수산업 지원 및 식량 확보
기타	11,098	풍력, 항만 시설 확충 및 특정 산업 지원 등

\* 주 : 집행위 자료('23.3월~'24.10월 승인 내역)를 활용해 저자 재구성

▶ EU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산 제품들이 급격히 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반보조금\*, 역외보조금 규정\*\*을 통해 대응

\* EU 역외국 보조금을 활용해 인위적인 저가 가격으로 수입된 역외 제품으로부터 역내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추가 관세, 가격 약정 등을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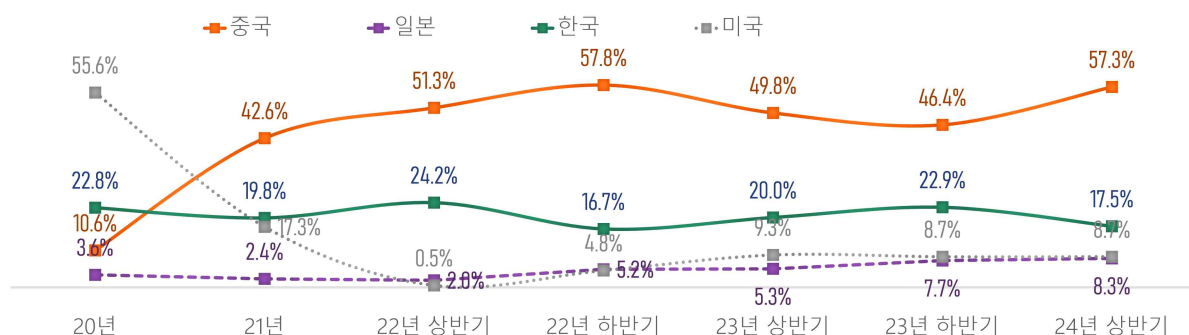
\*\* EU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대해 역외보조금 등 재정적 기여 현황 심사 및 시정 조치 등 부과

- 집행위는 불공정한 보조금에 힘입은 중국산 전기차가 최근 급격히 역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함에 따라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

\* SAIC의 MG 차량에 35.3%, BYD 17%, 중국산 테슬라에 7.8%의 추가 관세를 24.10.30부터 부과

- 최근 집행위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근거로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공공조달 입찰에 신청한 중국 회사들을 조사하자 중국 기업들이 입찰 신청을 철회

《EU 내 전기차(HS 8703.8`0)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자료 : UN Comtrade



## ② 新집행위의 주요 통상·산업 추진 과제

### (1) 주요 정책 목표 및 방향성

-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목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7월 발표한 ‘정치적 가이드라인<sup>6)</sup>’ 중 ‘지속적 번영 및 경쟁력 강화’를 첫째로 언급하며 2기 집행위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제시
  - ▶ 시급히 육성 및 경쟁력 회복이 필요한 산업으로 그린딜과 연관된 청정·AI·방위·제약 산업을 언급하며 2기 집권 시 각종 입법 조치 등으로 산업별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EU 주요 인사에게 요청한 특별 보고서가 EU의 주요 정책 가이드선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다수의 집행위원은 EU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답변 시 산업정책의 추진 근거자료로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의 ‘EU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sup>7)</sup>’,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의 ‘EU 경쟁력의 미래<sup>8)</sup>’, 사울리 니니스퇴 전 핀란드 대통령의 ‘EU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sup>9)</sup>’을 인용
  - ▶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친기업환경 조성, 역내 투자 활성화, EU의 자생력 강화, 역내시장 보호 등을 꼽음

《폰데어라이엔 2기의 산업정책 목표 및 과제》



\* 주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가이드라인’ 내용 참고로 저자 재구성

- (부다페스트 선언) EU 정상들은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비공식 정상회의(‘24.11.8)에서 ‘부다페스트 선언’을 발표하고, 트럼프 재집권에 대응해 EU의 경제·무역 자율성 강화 및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분야별 방안을 제시

《부다페스트 선언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단일시장 강화	‘25년 6월까지 단일시장 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
저축·투자 연합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26년까지 저축·투자 연합 구성을 위한 핵심 조치’ 계획

6) EU Commission,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2029, 2024. 7. 18

7) Enrico Letta, Much More Than A Market. 2024.4.

8) Mario Draghi,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

9) Sauli Niinistö, Safer Together – Strengthening Europe’s Civilian and Military Preparedness and Readiness



분야	주요 내용
산업	EU 산업구조 재편 및 탈탄소화를 위해 <b>통합적인 산업정책 추진</b>
규제 혁신	<b>'25년 상반기까지 규제 관련 보고 요구사항을 최소 25% 경감</b> 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방위 산업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민간 자원 확보방안 마련
연구·혁신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에 연구·혁신 집중, <b>'30년까지</b> 각 회원국이 <b>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b> 하도록 목표 수립
에너지	<b>에너지 연합</b> 을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 역내 전기 가격 변동성 문제 해결
순환경제	집행위에 <b>순환경제법</b> 제시 요청, 핵심원자재 재활용을 위해 통합시장 개발
디지털	<b>'25년 6월까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b> 및 <b>개인정보·보안</b>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타	인재육성 및 고용창출, 지속가능 무역,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 추진
자금 조달	상기 분야별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 수립 -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에 필요한 자금 확보, '자본시장연합'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 활성화, 유럽투자은행(EIB) 참여 확대

## (2) 분야별 주요 통상·산업 추진 과제

■ (과제❶: 친기업환경 조성)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취임 연설('24.11.27)에서 규제 간소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직접 언급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분류체계(Taxonomy)'는 '옴니버스(Omnibus)' 규정방식\*을 통해 기업 행정부담 완화 추진

\* 상이한 여러 규정을 하나의 규정·법률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관리

규정	주요 내용
CSRD ('24.1 시행)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 및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재무적인 영향 등을 보고의무 부과
CSDDD ('27 시행)	기업에게 ESG 관련 실사 절차를 내재화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ESG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제거 의무 부과
EU Taxonomy	역내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 '부다페스트 선언' 및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내 규제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집권 초기 발표할 것으로 예상

- 각종 규제 간소화 방안은 '드라기 리포트'에서 제안한 내용이 바탕이 될 전망
- 집행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경쟁법 재검토를 통한 역내 중소기업간 M&A 활성화, 기업 규모 범위에 중소·중견기업 범주를 신설 및 규제 완화, 부처간 입법 협조·단순화 등 추진 공언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경제·생산성 향상·정책 효율성 강화 집행위원은 기존 법률 체계 검토를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규정을 간소화해 기업의 보고의무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드라기 리포트 주요 내용) 기업 규제 완화 관련

- ▶ (현황 진단<sup>①</sup>) 최근 5년간 미국은 약 2천개의 연방법령을 입법조치한 반면, EU는 약 1만 3천개의 신규 법령을 입법조치, 아울러 EU는 입법으로 인한 유발 비용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부재
- ▶ (현황 진단<sup>②</sup>) '2023년도 유럽투자은행(EIB)의 투자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가 지나친 규제 간섭이 EU 내 장기적 투자에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응답, 아울러 규제로 인해 기업 생산비용 증가·시장진입장벽 강화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
- ▶ (제안<sup>①</sup>) EU집행위 부위원장 직급으로 '규제 완화' 담당직책 부여해 기존 법령 체계 단순화 및 신규 규제에 파급되는 비용적 효과를 정량화
- ▶ (제안<sup>②</sup>) 집행위가 이미 밝힌 바 있는 기업 보고 의무 25% 경감 방침 이행, 중소기업에는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축. 아울러 입법조치 초안 구성 과정에 관련 기업들을 포함하여 의견 반영

## ■ (과제<sup>②</sup> : 투자 활성화) 2기 집행위는 자본시장 단일화 및 역내 단일시장 조성 등을 통해 핵심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

### ▶ 개별 회원국이 아닌 범EU차원의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상이한 시장제도를 단일화해 기업이 단시간에 성장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필요

- 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합된 단일 경제연합을 결성하였으나, 회원국별 상이한 시장·노동·세금 제도로 인해 단일시장에 상응하는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
- 실제로 EU는 전략적 산업(반도체, 배터리, 수소, 클라우드, 의료 등) 육성을 목표로 '공동유럽이익 프로젝트(IPCEI)\*'를 활용하여 약 910억 유로를 투자했으나, 회원국별로 중복되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기금이 분산되어 투입되어 기업 육성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

\*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IPCEI)는 복수의 회원국이 관여한 첨단기술 또는 미래 중요 산업 분야의 전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 IPCEI로 지정되면 EU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완화됨

### ▶ EU 차원의 집중적인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연합(CMU)\*'을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 투자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역내 단일 자본시장을 구축해 중소기업 및 신규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장기프로젝트·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

- EU는 산업 전반, 디지털 및 전략 기술,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15년부터 자본 시장연합을 추진중이나, 금융시장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 중

\* 스테판 세주르네 경제·산업 전략, 중소기업, 단일시장 수석 부집행위원은 EU의회 내 집행위원 청문회에서 역내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연합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유럽의 자본은 수익성이 높은 미국으로 유출되고, 역내 벤처투자 자본은 50% 이상 역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유럽기업의 생존을 위해 자본시장 연합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sup>10)</sup>

10) European Central Bank, Follow the money: Channelling savings into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Europe, 2024.11.22.

- EU의 자본시장은 회원국간 금융규정, 감독기관, 결제·지급 시스템이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역내 자본 이동이 원활하지 않음. 또한 미국 등 경쟁국 대비 저조한 투자수익률로 민간 자금이 해외 투자로 유출되거나 예금에 집중되어 있음

#### (드라기 리포트 주요 내용) 투자 활성화 관련

- ▶ (현황 진단<sup>①</sup>) EU는 단일증권시장규제기관과 단일규정이 부재하고, 회원국별 지급·결제를 위한 사후 거래 시스템, 세제·파산제도가 상이하여 회원국별 금융시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높고, 회원국간 자본 이동이 어려움
  - ▶ (현황 진단<sup>②</sup>) EU는 단일시장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현황 진단<sup>③</sup>) EU 시장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대규모의 민간자금이 예금으로 저축되어 있음
  - ▶ (제안<sup>①</sup>) 자본시장연합을 구축하여 유럽증권시장청(ESMA)을 단일규제기관으로 전환하고 회원국별 상이한 금융규정간 조화를 추진
  - ▶ (제안<sup>②</sup>) 공동안전자산\*을 발행하여 EU 금융자산 가격책정을 위한 핵심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담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 EU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GDP('23년 기준) 4.4~4.7%에 해당하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
- \* EU 전체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금융 자산(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EU 차원에서 동일한 신용등급과 안전성을 보증.  
'21년, EU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을 통해 최초로 EU 공동 채권을 발행

#### ■ (과제<sup>③</sup> : EU 자생력 강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기 집행위의 최우선 이니셔티브로 <sup>①</sup>美·中과의 혁신 격차 해소, <sup>②</sup>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 <sup>③</sup>EU 안보 강화를 목표로 설정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채택<sup>11)</sup>

- ▶ (美·中과의 혁신 격차 해소) EU는 디지털,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회원국간의 협력 및 예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경제·산업 전략, 중소기업, 단일시장 수석 부집행위원은 '新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new IPCEI)'를 제안하여 첨단산업에 'EU 경쟁력 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 \* 2기 집행위가 제안한 기금으로 미국의 IRA 및 중국의 보조금에 대응해 EU의 독자 산업 경쟁력 확보 유도
- '08~'21년간 147개의 유니콘 기업이 EU에서 배출되었으나 이 중 40개사가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EU 특허 출원의 상업화 비율도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될만큼 혁신 기술을 갖춘 EU 기업이 역내에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뚜렷
  - EU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3%인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2.4%, 1.9%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의 필요성이 부각됨

11) European Commission, Speech by President von der Leyen at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on the new College of Commissioners and its programme. 2024.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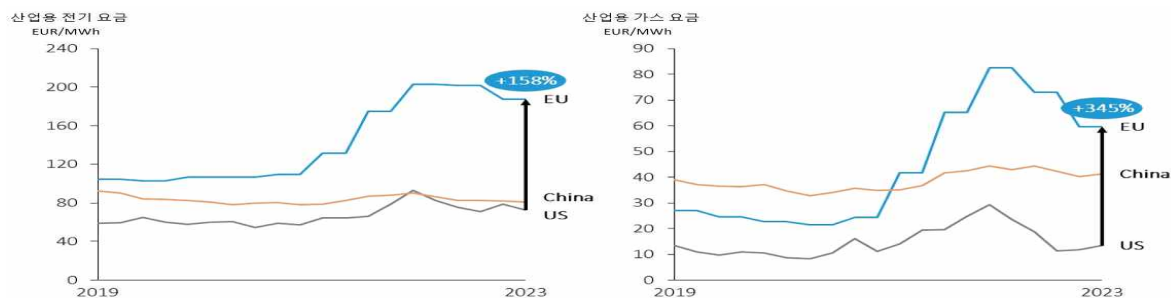
## (드라기 리포트 주요 내용) 美·中과의 혁신 격차 해소 관련

- ▶ (현황 진단<sup>①</sup>) ①EU의 강력한 산업 전략 부재를 경쟁국과의 혁신 격차 확대 요인, ②EU 기업은 GDP 대비 연구 개발비('21년)가 미국 기업의 절반인 2,700억 유로에 불과 ➡ EU가 산업 역동성·혁신·투자·생산성 성장이 모두 낮아지는 중간기술함정(middle technology trap)에 직면
- ▶ (현황 진단<sup>②</sup>) EU의 디지털 상품·서비스·인프라·지식재산권은 미국과 중국 등 역외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므로 민감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기술 주권 회복이 필요
- ▶ (제안) 차기 '기술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for R&I)'의 예산을 현재 규모의 두 배인 2,000억 유로로 증액하여 소수의 핵심 기술에 충분한 연구개발 예산을 배정

## ▶ (탈탄소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산업딜 (Clean Industrial Deal)'을 내년 2월말까지 제안할 계획

- 2기 집행위는 ①재생에너지 생산 역량 확대, ②청정기술제품 제조 역량 강화, ③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을 골자로 '청정산업딜'을 수립하여 청정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청정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
- (재생에너지<sup>①</sup>)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보를 위해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비용 절감이 필수
- (재생에너지<sup>②</sup>) EU 기업은 미국 대비 2~3배에 달하는 전기료와, 4~5배에 달하는 가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절실한 상황이며, '23.3월~'24.10월간 EU가 승인한 TCTF 보조금 중 38%가 에너지 공급사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지원에 투입된 바 있음

《'19년~'23년 EU, 미국, 중국의 산업용 전기 및 가스 요금 추이》



\* 자료 : Eurostat, EIA, CEIC 2024

- (청정산업<sup>①</sup>) EU는 역내 청정산업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자금지원·신속한 승인 등 행정 절차 간소화·공공입찰 시 역내 생산제품 우대 등을 추진할 계획
- (청정산업<sup>②</sup>) EU는 청정산업에 투입되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CRMA 신속 이행·우방국과 핵심광물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 아울러 '청정무역투자 파트너십(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핵심원자재 보유국과 체결하여 상호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
- (공정 탈탄소화) 탈탄소전환 비용이 높은 에너지집약 산업(화학 물질, 금속, 비금속 광물 및 펄프와 제지 제품)의 공정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법(an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을 마련할 계획

\* 공정 탈탄소화는 탄소 고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 등의 위기 등과 맞물려 주목. EU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은 저가 중국산 철강, 고에너지 비용, 수요 감소로 EU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CBAM의 공정한 이행을 촉구<sup>12)</sup>. 독일 최대 철강사인 티센크루프는 경영위기로 공장 폐쇄 및 11,000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

#### (드라기 리포트 주요 내용) 탈탄소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 ▶ (현황 진단<sup>①</sup>) 중국의 강력한 보조금 지원정책 및 역내 산업 보호정책으로 청정산업 산업경쟁력 강화 (태양광 PV와 배터리 생산비용이 EU 대비 최대 65% 절감). 미국 또한 IRA를 통해 최대 2,500억 달러를 청정산업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 ➡ EU 또한 강력한 투자 및 역내 산업 보호 정책 필요
- ▶ (현황 진단<sup>②</sup>) 핵심광물의 추출·제련이 소수의 국가에 밀집됨에 따라 EU는 광물 가격 변동성과 자원 무기화의 위험에 노출
- ▶ (제안<sup>①</sup>)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낮춰 산업의 탈탄소비용 절감을 통해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
- ▶ (제안<sup>②</sup>) 역내 청정산업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25년~'30년에 걸쳐 연간 4,5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
- ▶ (제안<sup>③</sup>)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탈탄소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25년~'40년에 5,000억 유로 투자 필요
- ▶ (제안<sup>④</sup>) EU 핵심 광물 공공조달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G7+핵심광물클럽(한국, 일본, 호주 포함)'을 결성하여 자원보유국에 대한 공공 투자를 진행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

- ▶ (EU 방위산업 육성) EU의 방위 및 안보 정책을 재정의하고 미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래EU 방위백서(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를 내년 2월말까지 제안할 계획
  - 미래EU방위백서에는 ①방위산업 역량 강화, ②방위산업 투자 확대, ③EU 방위 협력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sup>13)</sup>
  - 집행위는 EU 방위산업 프로그램 규정을 제안('24.3월)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25~'27년에 걸쳐 15억 유로를 투입할 것이라 밝힘
  - EDIP관련 회원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역외국의 EDIP 참여를 반대 해오던 프랑스가 최대 35%까지 역외 생산품 구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힘<sup>14)</sup>
  -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EU 방위산업 강화와 방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일 방위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5,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EU는 약 3,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파생된 금융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재건에 투입한다는 계획

12) Financial Times, Steel Thoughts: Europe must make a choice on the steel industry, 2024.12.3.

13) European Parliament,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 2024.11.5.

14) Financial times, France drops buy-EU demand for Brussels defence fund, 2024.11.25.

## (드라기 리포트 주요 내용) EU 안보 강화 관련

- ▶ (현황 진단<sup>①</sup>) EU 방위비 지출 총액은 미국 대비 1/3에 불과하고 미국의 방위산업 R&D 비용이 1,300억 유로('23년 기준)에 달하는 반면, EU는 107억 유로('22년 기준)에 그쳤다고 지적
- ▶ (현황 진단<sup>②</sup>)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무기라도 회원국간 보유한 모델이 매우 상이해 유지·보수 호환성에 애로를 겪음
- ▶ (제안<sup>①</sup>) 방위산업 조달시 EU 선호원칙을 적용하여 역내 방위산업 기업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제안<sup>②</sup>) 방위산업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의 방위산업분야 투자 제외 규정을 수정하고, 방위산업 기업 자금조달 관련 ESG 규정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
- ▶ (제안<sup>③</sup>) EU 회원국간 방위산업 수요를 통합하고 방산물품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제고하여 EU 방위 물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해야 함

## ■ (과제<sup>④</sup> : 역내시장 보호) EU는 역내 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도구를 활용해 역외기업의 시장왜곡 행위를 차단할 계획

- ▶ 2기 집행위는 중국 기업의 보조금 수령, 과잉생산 등 EU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

- 카야 칼라스(Kaja Kallas)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은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의 불공정경쟁 행위로 EU-중국간에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교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경제·지리적 안보를 지키는 것이 우선 정책이라고 밝힘

- 2기 집행위는 1기에 이어 역외보조금규정, 통상위협대응조치, 경제안보전략 등 다양한 무역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역외 기업의 역내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

\*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청정, 공정 및 경쟁력 있는 전환, 경쟁 수석 부집행위원은 역외보조금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불공정한 보조금을 수여받은 기업으로부터 역내 기업 보호하겠다고 밝힘

- ▶ EU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공공조달 규칙에 역내 생산 비율과 지속가능성 조항을 추가하여 역내 기업의 제품을 우대하는 등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

- 산업·기술 업계 로비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은 복잡한 규제환경과 역외기업의 시장왜곡 행위로 EU 기업의 탈산업화·탈유럽화(de-Europeanisation)가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며, EU 차원에서 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sup>15)</sup>

- ▶ EU는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계획

-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경제 집행위원은 미국은 EU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이나, IRA의 자국산업 보호 요소로 인해 EU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 상황에 처해있음을 지적하고, 수입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시 이에 대한 EU차원의 대응이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

15) Euractiv, 'Deindustrialisation is a reality', warns EU industry group leader. 2024.12.4.



### (드라기 리포트 주요 내용) 역내 시장 보호 관련

- ▶ (현황 진단<sup>①</sup>) 중국과 미국의 강력한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EU의 상대적인 산업경쟁력이 약화
- ▶ (현황 진단<sup>②</sup>)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은 역내 목표생산량을 설정하였으나 역내 생산 부품에 대한 최소할당량을 제시하지 않아 역내 기업이 동산업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함
- ▶ (제안<sup>①</sup>) '공동유럽이식프로젝트(IPCEI)'를 통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소형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어·관리 차량(SDV) 등 관련 분야를 육성할 것을 주문
- ▶ (제안<sup>②</sup>) 청정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EU 기업이 보조금 수령 역외 기업과의 경쟁 관계에서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 발생시 무역조치를 적용하여 대응
- ▶ (제안<sup>③</sup>) 보조금 및 R&D 세제혜택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통신 산업 공급사는 EU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보안을 강화

### ③ 우리기업 영향 분석 및 전망

#### 전망 및 대응 요약

- ▶ (긍정) EU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집행위·회원국 정책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산업**(풍력, 태양열, 배터리, 수소 등) 및 방위산업 관련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 영향 예상
  - 다만, 핵심 산업에 대해 역내산 우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EU 역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정책적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음
  - EU는 중국의 반시장적 조치로부터 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EU 역내에 생산시설을 확보 중 ➡ 우리 기업의 EU 역내 생산된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불가피
- ▶ (부정<sup>①</sup>) EU 경제 회복이 향후 최소 2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EU 시장 내 전반적 수요 확대 또한 어려울 전망
- ▶ (부정<sup>②</sup>) 집행위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수의 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핵심 국가(독일·프랑스 내 우경화) 정치 불안, 자원 확보 문제,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규제장벽 등이 걸림돌
- ➡ (대응) EU 내부적으로도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있어 **민·관이 합심하여 집행위 임기 초반에 역내 산업 역량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의 對EU 기여도 역설** 필요

#### (1) 긍정적 영향

- 2기 집행위는 청정산업 기술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방위산업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되어 동 산업군의 우리 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EU는 동 산업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상호 협정 체결을 통해 협력을 강화 중
  - 우리나라는 EU와 디지털통상원칙, 그린파트너십,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동 협정 등을 근거로 핵심 산업에 대해 EU와 전방위적으로 협력 강화 필요



- 드라기는 리포트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반도체, 방위,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을 언급하고 EU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또한, 동 리포트에서는 청정산업 강화를 위해 우방국과 공동으로 핵심원자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G7+ 핵심원자재클럽' 내에 우리나라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

#### 《EU의 최우선 정책 산업 관련 한-EU 협정》

협정	주요 내용
한-EU 그린 파트너십 (Green Partnership, '22.11.30)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에너지 전환, 방사성 기술 및 폐기물 처리, CCUS, 배터리, 저탄소기술 상용화 관련 산업 협력 강화
한-EU 디지털통상원칙 (Digital Trade Principles, '23.5.22)	디지털 통상규범을 업그레이드 하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교역 활성화, 안정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반도체, 무선 접속망, 6G, 양자기술, AI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24.11.4)	해양안보, 사이버, 우주, 방위산업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며,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 강화

▶ 재생에너지 확충 및 방위산업 강화는 민간 수요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정책  
이므로 EU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부터 비교적 적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 역내 생산한 제품·장비 등을 우선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제품·장비를 EU 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
- 차기 의장국이자 EU 방위분야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한 폴란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미국·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우방국 기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sup>16)</sup>

■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을 친러시아 및 라이벌 국가로 언급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 강화와 더불어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 예상됨

▶ EU는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EU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해옴

- EU는 역외보조금규정, 통상위협대응조치, 강제노동결부상품수입금지법 등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무역규정을 활용하여 대응 중이며,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경제 집행위원도 모든 무역조치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힘

▶ EU는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 반하는 중국의 행위로 인해 중국을 산업 뿐 아니라 안보에도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 이로인해 EU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EU는 중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수출통제 물품인 방산용품(드론, 굴착, 수송, 반도체 등)을 수출 우회를 통해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6) PISM, Poland and South Korea Should Further Develop Security Cooperation, 2024.10.28.

- ▶ EU 집행위는 12월 4일, 46억 유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청정 기술 분야의 공공입찰을 공시하고, '공급 안정성 및 의존성 대응(Security of supply and countering dependency)' 기준 추가를 언급<sup>17)</sup>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프로젝트를 우대할 것을 암시

- 공공입찰 관련 Q&A 문서에서 '대외 의존도와 공급망 안전을 위해 중국산 양극재, 음극재 및 활성 재료의 조달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밝힘

- ▶ 다만, EU의 역내 공급망 재건 기조에 맞춰 배터리 기업인 CATL<sup>\*</sup>을 포함한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역내 생산 시설 확보에 투자 중이어서 역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가 어려울 전망

\* 헝가리 데브레첸 100GWh 규모 공장 ('25.8월 완공), 독일 에르푸르트 92GWh 규모 공장 ('25년부터 순차 가동)

## (2) 부정적 영향

- EU 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독일, 프랑스가 자국 내 정치 불안으로 입지가 흔들리면서 EU 차원의 강력한 산업·통상 정책 추진력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 독일과 프랑스는 '25년도 예산 편성 갈등 등으로 연정이 붕괴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양국 모두 국내 극우 세력이 강화되고 있음 (독일은 진보, 프랑스는 중도 성향의 정당이 집권 중)

- 독일은 예산안과 국가 부채 이슈로 자유민주당이 연정(자유민주당·사회민주당·녹색당)을 탈퇴했으며, '25년 1월에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 예정. 불신임 시 2월에 조기 총선 전망

- 프랑스도 증세와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에 대한 논쟁으로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가결됐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24년에만 세 번째로 총리를 지명한 상황

- ▶ EU의 전반적인 정책과 더불어 자본시장통합(CMU)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양국<sup>18)</sup>이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 EU의 정책·예산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특히, 독일 극우 세력은 중국과 긴밀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산업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어 추후 독일 내 정치적 상황이 주목되고 있음

- EU의 경제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역내 시장의 수요 침체 우려

- ▶ EU의 '25년, '26년 EU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1.3%,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0.7~1.2%의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동기간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4%, 2.1% 및 4.7%, 4.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EU와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17)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Launch of the Innovation Fund 2024 Net-Zero Technologies and Battery Calls, 2024.12.3.

18) Jacques Delors Center, Capital Markets Union: Europe must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2024.7.11.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EU의 경제상황 악화 우려

- 주요 금융기관은 미국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시, EU의 GDP가 0.5~1.5%p 감소할 것이라 분석<sup>19)</sup>하며 EU의 경제 침체 우려를 제기
- 특히, 독일은 2년 연속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2.1%(‘23년 기준, EU회원국 제외)에 달해 경제적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됨

《EU, 미국, 중국 GDP 성장률 및 전망치》

지역	‘23	‘24	‘25	‘26
EU	0.5	0.8	1.3	1.5
미국	2.9	2.8	2.4	2.1
중국	5.2	4.9	4.7	4.4

《EU 주요 회원국 GDP 성장률 및 전망치》

국가	‘23	‘24	‘25	‘26
독일	-0.1	0.0	0.7	1.2
프랑스	1.1	1.1	0.9	1.0
이탈리아	0.8	0.5	0.9	1.2

\* 자료 : OECD Data

■ 최근 EU 내 자성의 목소리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 중이나, 기존에 추진 중인 각종 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시행될 예정이라 역내 수출·진출 기업의 규제 부담은 가중될 전망

▶ 에코디자인 규정은 각 제품군별로 순차적인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26.1월), 산림전용방지규정(‘25.12월)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다만,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ESG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EU의 높은 에너지 가격이 EU 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청정 산업 시설 건설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해 일시적·제한적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19) Goldman Sachs, The euro area is forecast to avoid recession despite Trump tariffs, 2024.11.25.  
ABN-Amro, What Trump tariffs would mean for Europe, 2024.08.28.

[첨부] 2025년 EU 집행위 주요 정책 추진 예상 일정

일정	영문명	한글명
출범일 100일 이내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	미래 EU 방위백서
	AI Factories Initiative	AI 팩토리 이니셔티브
	Roadmap towards ending Russian energy imports	러시아 에너지 수입 종료를 위한 로드맵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	농업 및 식품에 대한 비전
	Commission Work Programme 2025	'25년 EU 집행위원회 업무 계획
	Omnibus Simplification Regulation	옴니버스 방식 간소화 규정
	Clean Industrial Deal	청정 산업딜
	- 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 에너지 비용 절감 행동 계획
	-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법
	- European Competitiveness Fund	- EU 경쟁력 기금
'25년 초	- Chemical Industry Package	- 화학 산업 패키지
	- Industrial Action Plan for the automotive sector	-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 계획
	- (Possible) Circular Economy Act	- (잠정) 순환 경제법
	Approval of the first batch of strategic projects under the Critical Materials Act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른 첫 번째 전략 프로젝트의 승인
	Review reports on: Approval of new IPCEIs	새로운 IPCEI(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 승인 보고서 검토
'25년 6월	Single Market Strategy	EU 단일 시장 전략